李, 연임 선긋기… 민주 "국힘, 거부 명분 사라져" 국힘 "얄팍한 개헌 쇼"

與 "권력 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 역사 속으로"

野 "與, 최악의 인사 참사로 궁지에… 물타기 꼼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가운데 여야가 개헌 논의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을)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의)연임 불가 말씀이 나오면 '그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제게 얘기했다. 그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됐으니 (개헌 논의를)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5.18과 부마 항쟁 등을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권력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말하는) 내각제 등은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소재)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7년 체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헌법에 새기고,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의혹 덩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성난 민심에 밀려 불명예 사퇴하자 민주당이 돌연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며 "최악의 인사 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민심의 분노를 꼼수로 덮으려 할수록 정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만 더욱 앞당겨질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국정 상황이 엄망진창인데 진짜 개헌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국정 지지율 추락을 막아보려는 꼼수냐"라고 반발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재판 재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남용 논란, 그 장벽부터 무너져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말씀을 뒤집어 보면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런 워딩을 쓰고 있다"며 "'연임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그래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개헌추진단 출범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며 "철저한 국면 전환용이자 부적절한 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개헌추진단 출범식에서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서 우리는 총선 1년 전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엔 별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변수로 남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대여 공세를 장기전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당장 명절 연휴 직전인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주식, 특검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의 무능을 부각할 예정이다.

연휴 이후에도 매주 주말 서울 등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는 10월 3일부터 주말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다른 시선

기도지사(왼쪽)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 /연합뉴스

김민석 "탁월한 모범돼주길" 추미애 "경기도 재정 응급실 환자"

민주당 최고위 살얼음판

金 "멸칭 논란등 지혜 필요"

秋 "환자 살리려고 수술 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님께서 이끄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돼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는 최근 청와대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후 처음 대면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다. 국가안보를 위해 갑내해 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도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외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경기도의 고유한, 특별한 재정적 상황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일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경기도에서 제기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내용과 특수한 상황의 연관성을 잘 고려하고 당 차원에서 함께 의논하면서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갈등 문제와 관련해 "멸칭이라든가 품격 있는 정당내 토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다"라며 "그것은 상호 문제 뿐 아니라 당내에서 개인,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비평 등을 할 때 쓰이는 표현 등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 제기된 것 같다. 앞으로 당 전체가 함께 유념할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따로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다뤄 나가는 방법과 과정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단위에서 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희 당에 가장 필요한 12개 기구 중 하나가 정당개혁 관련 기구이고, 그 안에 숙의민주주의가 있고 품격 토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 지사는 "(지금)경기도는 크게 다쳐 응급실에 온 환자"라면서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응급수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건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라며 "1년 통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은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고, 10~12월 석달 예산이 비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 9기 경기도가 지금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일이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일"이라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의사는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하고 있는데 수술 중인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냐'고 따지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민생사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뛰고 있다"며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지 원인을 끝까지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李 지지율 10주만에 하락세 멈춤

긍정평가 34.8% 부정평가 63.4%

전화면접-긍정 50.5%, ARS-부정 53.3%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10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거나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전화면접과 ARS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흐름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잇따라 공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상승한 34.8%, 부정 평가는 0.1% 상승한 63.4%로 각각 집계됐다.('잘 모름' 1.8%)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9%p), 부산·울산·경남(3.2%p), 인천·경기(2.2%p)에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남·광주·전북(4.1%p) 하락했다.

여론조사꽃이 18~19일 조사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전화면접(긍정 50.5%·부정 45.3%)과 ARS(긍정 42.5%·부정 53.3%) 조사 결과 수치가 달랐다.

전화면접에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5.2%p 앞선 반면 ARS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10.8%p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권역별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호남권(81.0%), 강원·제주(59.5%), 서울(53.1%), 충청권(50.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구·경북(부정 59.1%)과 부·울·경(부정 53.7%)은 부정평가가 높았다.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42.5%)가 부정 평가(53.3%)를 10.8%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긍정평가 65.7%)을 제외하고 대구·경북(59.9%), 충청권(59.3%), 서울(57.1%), 부·울·경(54.9%), 강원·제주(53.5%), 경인권(2.6%) 등 전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 중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여론조사꽃 조사 중 전화면접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1003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9.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ARS는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투기 목적 농지법 위반 엄정 조치… 관행·경미 위반은 계도·제도 개선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야적장, 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단, 그 외에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현실 여건상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함으로써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제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행적 위반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라며 "꼼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실경작자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농지은행 장기 임대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서의 복구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사후 전용 추진 등을 통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후 전용을 신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靑 "김승원 가십 대답 의무 없어" 일축… 인사시스템 보완키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근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21일 "가십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후보자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저희가 30분안에 그 부분에 대해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을 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이라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도 다 다르고 나름 최선의 인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이런 저런 질문들이 있기에 아직도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았다고 대답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으로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나머지 이야기들은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판단과 다른 부분에 대해 또 한번 검증도 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러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했다고 보시면 된다"며 "이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고 대답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라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상당히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셨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기자분들이 질문해주셨지만 대통령께서 답을 명료하게 했고, 이번에는 비유나 설명보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대한 나름의 평가들이 있었는데,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답을 했다고 평가를 해 주셨다"라며 "저희는 그 평가를 지지 삼아서 또 다른 대답할 사항이 없을지, 혹은 준비할 부분이 없을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北, 미상 발사체 추가 발사

野 "핵 포기 않겠다는 의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1일 "절대 핵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앞서 김여정이 다국적 해상 훈련인 퍼시픽 뱅가드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례성 또는 능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어제 쏜 것이 KN-23 미사일이 맞다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800km 되고 보통 600에서 700km 날리기 때문"이라며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무기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험에 그치지 않고 개발이 완료돼서 배치하는 단계이 있다는 것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UN 총회를 앞두고 트럼프의 북미 대화 추진을 걷어찬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란 전쟁 수렁에서도 벗어나고 극적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걸로 등장한 게 미북 정상회담"이라며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가 있는 미사일이 전혀 아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런 미북 정상회담에는 거의 영향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패싱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미북 정상들이 만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소외가 되는, 과거 판문점에서의 회동처럼 그런 형식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